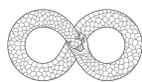

주간리트

수능 국어의
질적 공부를 위한
리트 언어이해



orbibooks

주간 리트를 만든 사람들

저자

조남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現 대치이강
現 「주간리트」 저자
前 상상국어평가연구소 검토위원

검토진

김민석 GIST 물리학과
오민석 전북대학교 의예과
이선우 『삼국사기』 저자
안수재 『혜음모의고사』 대표 저자
조경민 『만점의 생각』 저자, 『P.I.R.A.M(피램) 문학 시리즈』 공동 저자

강사, 출제진, 저자, 의대생
수능 국어 ‘강의’, ‘출제’, ‘집필’, ‘응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주간 리트」를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토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교재 소개를 마치며

본 교재를 구매하신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를 공부하며 리트 언어이해까지 공부하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목표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목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표로 도달하는 길에 수반되는 내적 불안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안과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마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결과적으로 입시에서 건승하여, 본인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12월

조남희 배서상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 ㉠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에 잘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이다.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도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들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이며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한편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업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토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른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늘날 토지가치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등하고 혼잡도 또한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 ② 토지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토지의 처분권은 보장하되 사용권과 수익권에는 제약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 ④ 토지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 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③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유층의 납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아울러 X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군.
- ②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X국의 '사치세'와는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군.
- ③ 과세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납세 부담이 추가되는 X국의 '사치세'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가치세에서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 ④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는군.
- ⑤ 조세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와 달리, 토지가치세는 도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군.

것처럼 자유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자기 자신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보기>에서 계봉은 승재의 그렇듯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계봉이는 이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까딱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돈을 받는 사실은 기쁘지만, 자신의 자존심(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는 철칙=자존심)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 지문에서 태수의 증여는 검은 의도를 숨기고 행한 증여이니 그것은 사악한 증여라고 평가 받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남에게 그저 베풀려고 하는 증여의 윤리가 있음이 지문에 제시되었고,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지문에서 타락한 교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계기들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코멘트

- + 수능 문학 문항을 푸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맥락을 판단해야 합니다.
- + 지문의 핵심(초봉의 몰락 과정)을 파악했다면 선지 판단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돌아가서 판단이 진행됐다면, 인물에 대한 체크 등을 통해 효율적인 판단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 언어이해 [13~15]

공정성과 효율성을 통한 좋은 세금 feat. 토지가치세

◇총평

- 개념&정의 확보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 다른 말 같은 뜻
- 상식적 사고 (기출 배경 지식에 근거한)

매우 좋은 지문입니다. 지문 초반 제시된 공정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이후 제시되는 내용들을 ‘납득’하며 독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지문입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보를 납득하면 체감 정보량은 매우 낮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기만 했다면, 체감 정보량이 많은, 버거운 지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선 순위는 개념을 확보하고,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것(다른 말 같은 뜻을 잡는 것)임을 인식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추가로 어휘 자체의 중요성과 기출에 제시된 개념을 숙지하고 있을 때 압도적으로 독해가 유리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면 당연히 좋은 세금이겠죠. 이 정도 내용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출에 나온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시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어휘 자체를 통해 이해합니다. ‘공정한’ 세금이니 자신의 능력, 이익만큼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tip 어휘 자체를 통한 이해

실제로 어휘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납득할 부분을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공정’이라는 어휘 뜻을 통해 지문에서 제시한 ‘공정성’의 개념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고, 이후 제시되는 ‘효율성’ 역시 ‘효율’이라는 어휘 뜻을 통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여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왜곡(비효율을 초래하는 왜곡, 손실)을 최소화하는 세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당연합니다. 어휘 자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야 하거나, 손실되는 비용이 있으면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효율적일 겁니다.

◇코멘트

‘공정성’과 ‘효율성’의 정의는 다른 지문이라면 관점에 따라 이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서 제시한 ‘공정성’, ‘효율성’의 정의를 정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제시되는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황은 사실 이 정의를 활용한 재진술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문에서 정의를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 정의대로 의미를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cf) 23.11 기초대사량 계산

‘체표 면적은 (체중)^{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 지문에서 단순 증감으로 비례를 따지는 것이 아님을 제시해준 문장으로, 해당 지문 <보기> 문항을 푸는데 이렇게 지문 내에서 정의한 개념을 확보하고, 그에 맞춰 판단을 진행해야 함을 알려주는 문항입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확보할 것을 해당 지문의 경우보다 더욱 엄밀하게 요구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지문에서 제시한 ‘정의’를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19세기 말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공정성, 효율성)에 잘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공정하며 효율적인 세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편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왜곡·손실이 없는 세금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념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지문을 독해해야 합니다.

◇코멘트

‘토지+가치세’이니 토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정도는 어휘 자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으면 이를 환수한답니다. 최소한 인물의 ‘관점’이니 정리는 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멘트

계속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념을 통해 납득해야 합니다. 공정성의 개념은 자신의 ‘능력, 편익’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과 기여’와 아예 무관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 ‘공정’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이를 환수한다는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사고 과정을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의(개념)를 확보했다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구성 요소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식 등이 제시되면 간단하게 <소유권 = 사용권 + 처분권 + 수익권> 정도로 가볍게 필기를 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코멘트

20.11 BIS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은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이다.

해당 부분을 독해하며 최소한 기계적으로라도 사용권 처분권(자유) / 수익권 중 개량 제외는 정부 환수와 같이 문장 내에서 구분한 대상들을 구분해주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tip 모두가 아는데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

거시적으로(구조적으로) 두 쌍이 나올 때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다는 독해 태도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비교·대조 구조의 지문이 나올 때와는 달리 이 문장처럼 문장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문장 내 역추론입니다. ‘불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노력은 내꺼네?’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현 수능 기조에서는 이렇게 문장 내 역추론을 스스로 생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cf) 2022 예시 충전기를 통한 충전지의 충전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일부만 방전하고 충전하는 걸 반복하면 용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충전지들은? ‘다른 충전지와 달리’라고 제시되었으니 다른 충전지들은 일부만 방전하고 충전하는 걸 반복해도 용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당 문장은 최소한 이렇게 기계적인 구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많기에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서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은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개량한 것은 ‘노력’입니다. 그러니 ‘토지 개량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 즉 불로 소득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말 같은 뜻이 반복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의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결국 수능 국어의 핵심입니다.

◇ tip 다른 말 같은 뜻

독서는 결국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독해 시, 기표(記標)가 다르더라도, 같은 기의(記意)를 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은 의미를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도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토지가치세로 다른 세금들이 없애도 될 정도라네요. 추가적으로 제시된 관점이니 확보하고 가면 충분합니다. 납득을 한다면 ‘땅이 매우 많으니까 가능한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 지식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므로, 두 사고 과정 다 본인이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들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계속 다른 말 같은 뜻을 잡으면서 가야 합니다. 초과 부담을 제거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갖춰진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성’을 갖추니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계속 강조하지만, 제시된 정의를 확보하고 그에 대해 다른 말 같은 뜻을 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었다.

조지의 ‘관점’이 추가로 제시됩니다. 토지를 제외하면 자유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관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핵심입니다.

◇코멘트

+ 주로 인문(철학, 사회 등) 지문은 제시된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만 말해도 ‘헤겔’, ‘아도르노’, ‘신채호’ 등 유명한 철학 지문은 결국 지문 전체가 인문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약간은 배경지식으로 얘기한다면, ‘토지’는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 개인 재산에 대해 저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누가 보면 사회주의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문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필요 없고, ‘관점 확보’ 정도만 하고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하는 세금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말을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앞선 개념을 통해서도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니 공정(자신의 편익에 따라 부과)하다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납세 부담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구분하며, 탄력도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탄력도가 낮다’는 기준에 맞춰 이후 내용을 파악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멘트
‘탄력도’는 기출에서 이미 등장한 소재입니다. 현 수능 경향을 고려할 때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죠. 실제로 탄력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후 제시되는 토지의 비탄력성, <보기> 문항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납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이 시행된지 30년 언저리이고, 리트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누적된 ‘지식’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중에 빈출된 개념은 알아야 합니다.
cf) 22.09 (가)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광고, (나) 광고의 파급효과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 해당 지문에서 탄력성의 개념을 익혀두었다면, 해당 지문 독해 시 납득이 매우 쉬웠을 겁니다. 기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맥락을 담은 개념이 출제되는 경우는 많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이며

탄력성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탄력성의 개념을 몰랐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옮길 수 있는 정도 = 탄력성’ 정도로 ‘개념’을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납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으면 소유주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공정한’ 세금이 됩니다. 결국 또 ‘공정성’의 개념을 재진술한 수준입니다.

한편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면 당연히 효율적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납득하고 갔어야 합니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한다.

다른 경우는 과세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한답니다. 이는 ‘토지’와는 다른 경우겠네요. 다른 대상과 토지의 ‘차이’를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물론 토지도 아예 초과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업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예시를 제시해줬습니다. 당연히 앞선 개념과 대응해야 합니다. ‘과세’가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자동차에 과세하면, 거래가 줄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개발이 위축되겠죠. 앞선 말의 재진술 수준입니다.

◇tip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연결
이 구간은 정확하게 앞선 개념을 설명해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니 필히 앞선 개념을 당겨 읽었어야 합니다.

◇코멘트
추가로, 배경 지식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세금이 증가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위축(반대도 가능하겠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가져갑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앞서 토지는 초과 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재진술 수준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토지 공급 안 줌) 정도를 확보했으면 충분합니다. 사실 땅을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토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른다.

구체적 수치이고,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토지가치세의 ‘효율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코멘트

구체적 사례, 수치 등은 문제화될 수 있기에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이라 제시하며 화제가 바뀔을 제시합니다. 토지가치세가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화제가 변했음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코멘트

저는 ‘몇 가지 이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보 나열’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정도를 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단순 나열이면 돌아와서 판단한다는 인식인 것이죠.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학 등에서 일반적인 흐름임을 이전 지문들에서도 제시했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대립쌍

이는 법, 경제, 과학 등에서 빈번한 흐름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구분하는 것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구분하는 흐름은 하나의 대립쌍으로 기출에서 이미 자주 빈출된 표현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조세 저항도 문제가 된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가치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들 역시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각각의 나열된 이유를 ‘구분’은 해주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코멘트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토지가 거의 없고, 건물이란 구분도 애매하고, 세금에 대한 저항도 있겠죠. 이 정도의 상식적 수준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가치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비판이 제시되었다.’라고 말한 뒤 이후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 자체만 챙겨가면 충분합니다. 이후 관련 이유가 제시되면 이유를 통해 비판을 납득해야 합니다.

백 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의 시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 불평등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비판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 이유 역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그대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토지가치세만으로 세금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오늘날 토지가치세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토지가치세를 비판하다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환경을 제시합니다. 이게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니, 외부 효과의 개념을 확보하고 이를 납득합니다.

◇코멘트

이런 서술 흐름은 익숙해야 합니다. ‘A는 B이다.’ ‘B는~’ 식으로 서술해주면 구체적으로 서술된 개념을 확보해야 하고, 만약 워딩만 제시되면 워딩 정도만 체크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등하고 혼잡도 또한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

첨단산업 분야가 들어온 경우는 예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임대료도 늘고 혼잡해집니다. 여기서 소유자들은 이익을 얻지만, 손해는 지역민이 갖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 지문의 ‘핵심’과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최소한 ‘공정성’은 갖춰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문은 ‘핵심’을 통해 독해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외부 효과 발생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정성’의 개념을 계속 확보하고 읽었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치세를 높이면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니까요. 결국 처음에 제시된 ‘공정성’, ‘효율성’의 개념을 확보하고 그를 계속 당겨 읽으며 다른 말 같은 뜻을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tip 당겨 읽기

여기서 ‘이러한 상황 = 외부 효과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당겨 읽었으면 14번 문항의 1번 선지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추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cf) 19.11 계약에 대한 이해

‘이러한 사건(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닌 이행 불능에 의함)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13~15] 문제 해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 ② 토지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토지의 처분권은 보장하되 사용권과 수익권에는 제약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 ④ 토지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았다.
- 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답 ①

2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가치세는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입니다.

즉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내 역추론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답 선지 분석

② : 2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즉 토지가치세로 제정에 필요한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 2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사용권과 수익권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④ :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토지가치세가 공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문 어디에서도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인과가 제시되는 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cf) 19.09 STM <보기> 문항 5번 선지

⑤ : 2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조지의 관점에서 토지단일세에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자유 시장을 옹호한 겁니다.

◇코멘트

선지에 주의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역추론, 허위 인과 등의 구성은 익혀두도록 합시다.

14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자동차세의 인상이 자동차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③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조지의 이론을 계승하는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⑤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토지가치세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답 ⑤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즉 단순 일치 수준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한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조세 저항’은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등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 상황과 구분되어 제

시된 문제 상황입니다. 두 상황을 구분해줬어야 합니다. 13번 문항의 4번 선지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답 선지 분석

① :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상황(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반면,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게 전가되는 외부 효과 발생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면 외부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② :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차 거래가 감소하여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세가 돼도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걷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의사 결정은 유지되니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③ : 토지가치세가 단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누진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임금 근로자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참고로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입니다.

④ : 2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조지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소득 중에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토지에 대해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만 정부가 환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조지의 이론을 계승한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할 겁니다.

◇코멘트

‘추론’ 역시 ‘지문’의 근거를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유층의 납세 부담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량 해고되었다. 아울러 X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 ①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군.
- ②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X국의 '사치세'와는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군.
- ③ 과세 대상자 이외의 타인에게 납세 부담이 추가되는 X국의 '사치세'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가치세에서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 ④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세와 달리,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는군.
- ⑤ 조세 개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X국의 '사치세' 및 Y국의 '담배세'와 달리, 토지가치세는 도입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근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군.

<보기> 분석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함.

- 요트 구매자에게 세금 부과 사치세 도입
- 요트 구매자 이탈(탄력)
- 요트 공장은 변화 어려움(비탄력) / 노동자 해고
- 근로소득세 인상 (대상 변경)

Y국은 담배 소비 줄이려 함.

- 담배세 인상
- 담배 구매자 이탈 미미(비탄력)
- 조세 증가(대상 유지) / 불만 고조

답 ④

3문단에 따르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

은 납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적임이 제시됩니다. 즉 토지는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Y국은 담배 구매자들의 이탈이 미미한 것에서 이들이 비탄력적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에게 납세 부담이 부과되었다는 것에서 비탄력적인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X국은 요트 구매자들이 이탈한 것을 고려할 때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하려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은 다른 물건으로 눈을 돌렸기에 결과적으로 '사치세'로 인해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부담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답 선지 분석

① :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가치세는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X국의 사치세는 요트를 구매하려는 사람, Y국의 담배세는 담배를 구매하려는 사람, 즉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② :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는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과 함께 초과 부담을 유발합니다. X국의 사치세는 일하던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초과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담배세는 세수만 증가하고, 불만 정도만 발생했지 초과 부담이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며,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③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세금 부과 사치세 도입한 이후 근로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습니다. 즉 과세 대상자(부유층)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도 납세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Y국의 담배세는 담배 구매자 이탈 미미하였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을 통해 과세 대상자(흡연자)에게 납세 부담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의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통해 토지가치세에서도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⑤ :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들이 요트 구매를 줄이고 지출 대상을 바꾼 점에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Y국의 경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Y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토지가치세는 G7 대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 정도가 GDP의 14~50%에 이릅니다. 구체적인 사례, 수치 등은 출제되기에 돌아가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